

고유가 극복...K-패스 연계 '광주G-패스' 혜택 확대

시차 출퇴근 환급률 30% 상향·'모두의카드' 기준 완화 교통비 절감·교통혼잡 분산 기대...광주 청년범위 확대

광주시는 중등 전제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시차 출퇴근 시간대의 '케이(K)-패스' 환급률을 높이고, 케이(K)-패스 기반 정책

패스인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맞춰 시는 정부 정책과 '광주 지(G)-패스' 중 혜택이 더 큰 쪽을 자동 적용해 지원폭을 넓힌다. 이날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차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에 대중교통

을 이용할 경우 '케이(K)-패스' 환급률이 종전보다 30%씩 추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 50%, 청년·어르신·2자녀 부모 60%, 3자녀 이상 부모 80%, 저소득층은 83.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7세 광주시민이 시차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32회 이용해 4만 원의 요금 발생했다면, 청년 환급률 60%를 적용받아 2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 외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광주 지(G)-패스' 혜택(일반 20%, 청년·2자녀 부모 30%, 어르신·3자녀 이상 부모 50%, 저

소득층 64%)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시민의 혜택이 더욱 커진다. '케이(K)-패스' 이용자의 한 달 대중교통비 자부담액이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자동 전환돼 일정 금액만 자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7세 광주시민이 '케이(K)-패스' 카드로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

버스를 47회 이상 이용할 경우 '케이(K)-패스' 환급보다 '모두의 카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두의 카드'로 전환돼 월 2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다. 19세 이상 성인은 '케이(K)-패스' 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에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다. 카드가 없는 시민은 가까운 은행에서 '케이(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공식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14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카드에 '케이(K)-패스' 기능을 추가한 카드를 출시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환승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영선 시 교통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의 핵심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분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실국장 정책회의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대통령령이 정부 차원의 점검·지원을 언급한 여성세계성평화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이 대통령 “지역 단위 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어야”

국무조정실 '5극3특 메가특구 추진안' 보고 김정관 “재정·인프라 등 7개 패키지 파격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지역 단위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대규모) 규제특구는 특정 권역을 묶어 규제·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산업과 지역 성장을 실행하는 구역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산업 분야는 '네

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이른다. 이와 관련해 “계속 떨어지는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불필요한 비효율 규제를 정리하거나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해야 한다.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또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의 가장 독특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산업이 발달할수록 공공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장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규제를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윤 실장은 “현재 2400여 개 지역에서 80여 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에 분산돼 있고 소관 부처도 나뉘어 있어 효과가 크지 않아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메가특구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메가특구의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현장 수요의 반영, 규제개선·행정 처리의 초고속 실행, 집중적 지원 제공, 지역 성장 및 전략산업 육성 효과의 극대화 등을 들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에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제,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를 말한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업할 수 있는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로봇 메가특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특구를, 국토교통부는 AI기술중핵 메가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5일만에 업무 복귀 강기정 광주시장 “전남광주 통합무게 더 크게 느껴”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도전해 직무가 정지됐던 강기정 광주시장(사진)이 15일 업무에 복귀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일 만에 시장에 복귀한다”고 알렸다. 이어 “(선거기간) 전남·광주를 돌아보면서 통합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들의 통합이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믿음을 더 크게 갖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빈 자리를 잘 메워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전경의 여파로 더욱 힘들어진 기업과 일상을 지켜내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강 시장은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의 직무는 자동 정지됐다. 강 시장은 민주당 통합시장 후보 본 경선을 앞두고 신정훈 의원과의 단일



화 여론조사에서 패배 재선 도전의 꿈을 접었으며, 지난 14일 민형배 후보가 6·3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됨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다. 강 시장은 향후 민선 8기 시장 마무리와 함께 행정통합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공백 기간 시정을 챙기기 위해 업무보고만 받고 별도의 일정은 잡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재선 도전 실패 이후 강 시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에만 매진할 예정이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 행정통합 앞두고 중복규제 정비 착수 기업투자·주민 불편 해소 방안 논의...경제권 혁신 모색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맞춰 기업 투자와 주민 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정비를 나섰다. 전남도는 15일 나주에서 도와 시군 규제 혁신 업무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워크숍을 열고, 올해 추진 방향과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중복·불합리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 경제권에 걸맞은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올해 전남도 규제혁신 추진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정부 규제개혁 정책 특강,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행정통합과 지역 현안 관련 규제 발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 특강에는 이기영 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이나 좋은규제 시민포럼 지방규제위원회 이사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전남형 규제혁신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비효율을 줄이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송문경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규제혁신은 통합 전남·광주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 광주 광역의원 경선 후보자 등록 완료 19개 선거구 62명...20~21일 권리당원 ARS 투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지역 광역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시장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등록 마감 결과 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서구 3선거구를 제외한 총 19개 선거구에 6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평균 3.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구 4선

거구, 남구 1선거구 등 2곳은 각각 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경선은 1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17~19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0~21일 권리당원 ARS 투표로 진행된다. 시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세부적인 경선 룰, 투표 진행 방식, 선거 운동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경선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

강훈식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 확정” 나프타 210만톤 확보...작년 기준 원유는 석달 물량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엔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전남 민주당'서 계속

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쇄적인 경선 중단과 방식 변경이 선거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대리투표 의혹과 명부 유출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며 경선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라며 “여수의 경우 경선 방식 변화가 정해진 만큼 이후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선 일정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조정되면서 후보 선출 지연과 선거 준비 차질도 불가피해졌다.